못자리용 상토 탈락업체 제품 부정 공급 '의혹'

함평 학교·신광면에 탈락업체 제품 공급…군, 보조사업 관리 부실
업체 담합 가능성…공급업체 "법인 변경 과정 중 포장이 잘못" 해명

함평군이 농협과 함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못자리용 상토 공급 사업'〈광주일보 2월10일자 12면〉이 부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읍·면에 공급한 못자리용 상토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제품이 아닌 탈락업체 제품이 공급되고 있어 농업 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함평군과 농협 등에 따르면 군과 농협은 지자체 협력 보조사업으로 못자리용 상토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면적 6500㏊에 사업비 7억3125만원(군비 70%, 농협 20%, 농가 10%)이 투입됐다.

함평군은 지난 2월 농업기술센터에서 못자리용 상토 공급업체 선정위원회를 열어 입찰에 참여한 일반상토업체 12곳과 친환경상토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상토의 품질·가격 등에 대해 사전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 일반상토와 친환경상토 각각 3개씩 총 6개 제품을 확정해 4개 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함평군은 그동안 상토 제품을 1~2개만 선정하다 보니 탈락업체들이 반발하며 공정성 시비 등 잡음이 일자 지난해부터 6개 제품으로 확대했다. 또 전남도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 차원에서 전남지역 내 생산업체에 대한 가점을 지난해 5점에서 올해 10점으로 높여 총점에 합산해 평가했다.

이 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농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는 4개 업체 6개 제품을 확정했다. 공급업체 4곳 중 3곳은 전남지역 업체로 확인됐다.

함평군은 못자리에 앞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고, 물량을 지역별(읍·면)로 배정해 상토를 공급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 공급된 상토가 선정위가 선정한 제품이 아닌 탈락업체의 제품이 공급돼 '업체간 담합'이나 '페이퍼컴퍼니 입찰' 의혹 등이 일고 있다.

상토 공급이 부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함평군과 농협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담당자들이 아예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 광주일보가 확인한 결과, 학교면과 신광면에 공급된 상토는 입찰에서 탈락한 충청지역 A업체와 경상지역 B업체의 제품이었다

이에 대해 상토 공급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법인 변경 과정에서 일부지역에 공급된 상토의 포장이 잘못돼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며 "내년에는 오해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함평군은 선정위에서 선정된 6개 제품 외에 추가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정 공급을 인정한 것으로 못자리용 상토의 부정 공급과 관련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선정 제품이 아닌 상토는 새 제품으로 교체해 공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상토를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앞으로 입찰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못자리용 상토가 함평군이 선정한 제품이 아닌 입찰에서 탈락한 제품이 농가에 공급돼 업체간 담합 의혹과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화순군과 산림청이 전국 최초로 화순읍 수만리에 '의료 연계형 산림치유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과 관련, 최근 산림청에서 산림치유시설 기본설계 최종보고회가 열렸다.〈가운데〉 의료 연계형 산림치유시설이 들어설 수만리 생태공원〈왼쪽〉과 조감도.
〈화순군 제공〉

치유 숲에서 힐링하고 전문 의료기관서 치료 받는다

화순군 '전국 최초' 의료연계 산림치유시설 조성…수만리에 내년 완공

화순군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휴양 등 의료 연계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치유·휴양·레저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산림자원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시설' 조성 사업이다.

지역 의료서비스 기반과 산림자원을 연계해 치유·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와 양·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이 참여해 산림시설과 연계한 의료와 산림치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시설은 산림청이 직접 시행해 내년까지 화순읍 수만리에 조성할 예정이다.

화순군과 산림청은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기본설계와 공원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자문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모여 기본설계 최종 보고회를 열고 조성 계획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종 보고회에서 유명기 화순군 산림산업과장은 산림청 국책사업에 걸맞게 산림치유시설의 규모화와 다양한 의료 서비스,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의료연계형 치유시설의 기능, 조성 효과, 사업비 증액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사업비 증액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화순군은 산림청과 사업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추가 국비 확보 활동에 전력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주변의 산림 치유·휴양·관광 자원과 의료 인프라(의료관광)를 연계해 의료연계형 치유시설을 새로운 산림복지 모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의료연계형 치유시설 조성 예정지 주변에는 만연산 오감연결길, 치유 숲길, 치유의 숲 센터, 숲속체험장과 동구리 호수공원 등 기반이 조성돼 있다. 그동안 화순군은 만연산 일대에 치유의 숲을 조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곳은 매년 3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가 됐다.

만연산 철쭉 군락지, 수만리 생태숲공원, 수만리 숲속 야영장(공사 중)으로 이어지는 절경은 이른바 '화순의 알프스'로 불리며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가 주변에 자리잡고 있어 전문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 활성화 등 시너지도 기대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시설을 조성해 차별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순만의 새로운 산림복지 모델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치유·휴양·레저 시설 등 기반을 확충해 문화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 참두릅 드시고 코로나19 이기세요"

피로 회복·면역력 증진 효능

장성군은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에 효능이 있는 약용채소 '참두릅'이 본격 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참두릅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혈당을 내리고 혈중지질을 낮춰준다. 신장병 예방 효과도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청정환경에서 재배된 '장성 참두릅'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참두릅은 재배시설에서는 3월 중순부터, 노지에서는 4월 초부터 수확을 시작했다. 장성지역 참두릅 재배 규모는 73농가 28.6㏊다. 장성군은 오는 2023년까지 50㏊ 규모로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힐링약용채소단지 조성 사업'으로 참두릅을 재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남농업기술원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장성 특화작목이 됐다. 총 10억원을 투입해 약용채소 생산단지 조성, 약용채소 6차산업 소득화, 브랜드 육성 및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육성자금 '4억 → 5억' 상향

나주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고, 이자(연2.0%)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운전자금이다.

나주시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연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만기연장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중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다.

지원 신청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나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